4 · 3보고서 확정의 의미와 과제

박찬식 제주 4 · 3연구소 상임이사

지난 10월 15일 '4 · 3'의 진상을 드러낸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빌었다. 실로 '4 · 3'이 발발한 지 55년 만에 비로소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줄기차게 전개되었던 진상규명운동은 큰 획을 긋게 되었다. 진상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근거해 희생자 선정과 명예회복사업이 마무리되어 갈 것이다.

1948년 5월 초, 5 · 10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한라산으로 피신한 주민들(가족 단위로 피신)

55년 진상규명운동의 성과

이번 진상조사보고서는 '4 · 3'을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4 · 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위령하고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4 · 3' 해결운동에 주력하여 왔다. 하지만 '4 · 3'에 대한 논의는 금기의 대상이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거론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여겨지는 암울한 시대를 겪어왔다. 그러기에 '4 · 3' 진상규명운동은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운동이며, 인권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다.

'4 · 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전에 한국 근현대사의 잘못을 정부가 나서서 청산하고 공식 사과했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친일문제의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좌절되었고, 4 · 19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 6 · 25 전후 양민학살 진상조사 작업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다가 그나마 5 · 16쿠데타로 중단되었다. 그러기에 '4 · 3'은 전체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 청산의 시금석이라 할 것이다.

보고서의 아쉬움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덧씌워졌던 냉전의 올가미는 벗겨졌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과거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군 · 경 관련 조직과 우익단체들의 의도적 훼방이 이어졌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군 출신 중앙위원과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은 확정되는 그날까지도 조선일보를 붙들어 매고 실컷 한풀이를 해댔다. 이런 가해자 측의 의견을 대변한 기획단원과 중앙위원들의 악착같은 훼방으로 '초토화 작전'이 '강경진압작전'으로, '집단학살'이 '살상'으로 바뀌고, 학살 범죄를 저지른 9연대장 송요찬, 2연대장 함병선 등의 실명이 감춰져 버렸다. 또한 실질적인 군사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국의 집단 주민학살에 대한 직접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비밀자료들을 발굴하는 데도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4 · 3' 의 성격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에 중점을 두다보니, '4 · 3' 의 전체 성격을 미군정 · 경찰 ·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 분단을 반대했던 통일지향적인 움직임 등으로 이끌어내기 힘들었다. '정명(正名)' 이 없는 '사건' 으로 귀결되어 버린 것이다.

'4 · 3' 은 결코 제주도라는 작은 갇혀진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4 · 3' 은 "거대한 외압에 대한 지역민의 정의로운 저항"이었고, 제주도민의 공동체적 특수성이 저변에 깔려있는 사건이다.

'4 · 3' 당시 제주도민들은 좌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낮에는 해안으로 밤에는 산으로 피해다녔다는 식의 얘기는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후대의 피해인식의 소산이다. 자칫 이런 주장은 제주도민의 교육수준이 낮았고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정세의 추이를 잘 몰라 좌익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쉽게 휩쓸려 들어갔다고 봄으로써, 당시 제주도민을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제 치하 제주도는 강력한 항일투쟁, 해방직후 자율적인 사회운동 결사체의 조직, 높은 교육열, 일본 · 한반도 내륙과의 잦은 교류를 통한 정보의 유입 등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더구나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적 연대감, 어려운 자연 조건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함 등으로 해방 직후 한반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성이 친일파와 우익청년단에 의해 파괴되어 나가는 지점에서 '4 · 3' 이 발발하였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4 · 3' 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주도는 자존심이 담긴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민중사적 역사인식의 본보기로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4 · 3' 은 왜곡된 분단체제로 나아가던 남북한 정치권력 및 미 · 소 군정에 대하여 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바탕에 깔고 있는 통일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당시 통일의 주장은 우선 5 · 10 단독선거 반대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곧 북한체제로의 통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김구 · 김규식 등이 나섰던 중도파의 통일논리와 동일선 상에 있는 것이었다. 평화협상이 위로부터의 움직임이었다면, '4 · 3' 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통일을 향한 분위기 속에서 통일민족국가가 이루어지면 '4 · 3' 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생적 · 민중적 통일운동으로 자리 매겨질 것이고, 결국 '4 · 3' 은 남북한 체제 모두에게 중간적 입장에서 떳떳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나아가 냉전체제의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할 역사적 근거로서 '4 · 3' 은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4 · 3' 은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통일을 향하는 지향점으로서, 냉전체제의 장막을 걷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상징 사건으로서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에 확정된 보고서 서문에 "보고서가 4 · 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뒀으며, 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타나면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로, 향후 '4 · 3' 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정사(正史) 편찬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진상조사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4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7개의 건의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게끔 진상규명운동의 주체들이 나서 감시 · 촉구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정부 건의 7개항 중에는 제주도민과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 정부 차원의 4 · 3사건 추모기념일 제정,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추진 등 굵직한 사안들이 들어있다. 이들 사업은 말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고 기존의 4 · 3특별법(령)을 개정해야만 실천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4 · 3특별법 개정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중요하고 지속적인 '4 · 3' 해결운동의 장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큰 숨을 쉬고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할 시점이다.